

여야, 손실보상금 추경 ‘동상이몽’

민주 “여야 합의부터”

국힘 “정부 설득해야”

공감대 형성 구체적 절차 이견

국회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중민 총괄선대책임위원장이 코로나 손실보상으로 '100조원 카드'를 꺼내 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역제안하면서 일견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된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를 놓고서는 첫 단추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다툼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라며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윤 후보와 온도차를 드러낸 데 대해 “어박자가 전혀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이런 입장차는 옛날길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민심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추경에 찬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내년도 607조 7000억원 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추경을 추진한다는 부담이 크다. 재정여력에 대해

간간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로 추경이 편성돼 조기 집행되면, 내년 3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집권여당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각 후보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여야 원내 지도부는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통화에서 “예산편성권도 없는 이재명 후보가 추경하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는 나중에 또 말을 바꿔 ‘진짜로 추경하자고 하는 건 줄 알았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정부 핑계를 대면서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오른쪽),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두 전 의원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대통합 1호’ 김관영·채이배 입당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내 대사전 및 여론 대통합 방침을 밝힌 뒤 이뤄진 첫 ‘합류’로, 민주당 출신의 호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입당원서에 서명했다.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대 때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했으며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 채 전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채 전 의원은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각 위원회를 이끌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제 고향이자 정치적인 뿌리”라면서 “저는 민주당이 혁신과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진보와 실용주의의 길에서 국민의 고단한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공정 경제 정책을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복수후보로 가느냐, 희망으로 가느냐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 개혁진보 진영은 한 몸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진찍으러 강원갔나” vs “흠집내기 사실 왜곡”

여야, 윤석열 강원 시군 변영회장 간담회 놓고 공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주말 강원 지역을 돌며 바다 민심 다지기를 이어갔다. 윤 후보의 지난 11일 강원도 시군 변영회장 간담회를 놓고는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 방문으로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은 윤 후보는 ‘외가’라는 연고, 검사 시절 강릉지청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내세워 친근감을 드러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만큼 주로 안보 일정을 소화했던 기존 보수 정당의 관례를 깨고 지역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경제 행보로 차별화를 꾀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울곡 이이와 신사임당 영정에 참배했다. 이어 윤 후보가 “확장 시절 자주 찾았다”던 속초 대표항에서는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토지 이용과 관련한 중증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철폐하겠다고 강원도를 ‘경제 특별 자치도’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군사·환경·산림 등 중증 규제가 돼 있어 외부투자가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규제받는 쪽에서 보면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당 중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연 강원도당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탄한 조직력을 주문했다. 이어 강원도 18개 시군 변영회장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내일 있는 간담회 없이 사진 찍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후보의 성공적인 강원 방문을 흠집 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예정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고, 간담회 요청을 뿌리친 채 기념사진만 찍고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윤 후보의 강원도 행은 강원도의 외손을 저지하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불통 정치”라고 비판했다.

일부 간담회 참석자가 항의한 대상은 윤 후보가 아니라 변영회 지도부였다는 국민의힘 측의 반박에 대해선 “일도당도없는 변명”이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궤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어쭙잖은 궤변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즉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강원도민, 나아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고,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박 논평을 내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간판 내건 새시대위... ‘반문 빅텐트’ 시동

현판식 갖고 본격활동 시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진영의 양 날개 중 하나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2일 간판을 걸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위는 후보 직속으로 꾸려져 당적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별당대로, 외연 확장’이 주임무다.

새시대위는 이날 윤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활동 개시를 알렸다. 13일 조직도와 본부장 인선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윤 후보가 캠프 합류를 공식 발표한지 21일 만에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현판식에서 “저희 선대위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 실용주의 선대위이며,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며 “새시대위가 뉴 프론티어에서 국민의 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줄 것이고 아직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다 담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다 포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굵금이 생각해보도 결론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고 정권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 후보 뿐”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새시대준비위가 특목히 한 역할을 해내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이어 “(정권교체 여론과 윤 후보 지지도의) 간극을 줄이는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새시대위는 정권교체에 찬성하지만 국민의힘 입당에는 주저하는 중간 지대의 중도와 합리적 진보 세력, 2030 청년 세대 등이 모두 함께 할 플랫폼을 지향한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지만 등돌린 중도층을 향해서도 적극 손길을 내밀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게호 발의 ‘농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게호(담양함평영광광장성)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앞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고,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다 고품질의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명절선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판로축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 및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가문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국민 식생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근거 마련 등 의미 있는 민생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